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중관계 전망

국방대학교 정한범

2024. 1. 11.

제1차 RINSA 세미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올해 최대의 위협은 ‘자신과 싸우는 미국’”

전례 없이 문제가 많은 미국 선거가 세계의 안보, 안정, 경제 전망에 그 어느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

미국 대선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이 지난 150년간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민주주의를 시험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약화할 것.

미국의 대선이 세계 80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하겠지만, 오직 1억 6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투표하며, 특히 고작 몇 개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승자를 결정.

-- 유라시아 그룹 (정치위험 분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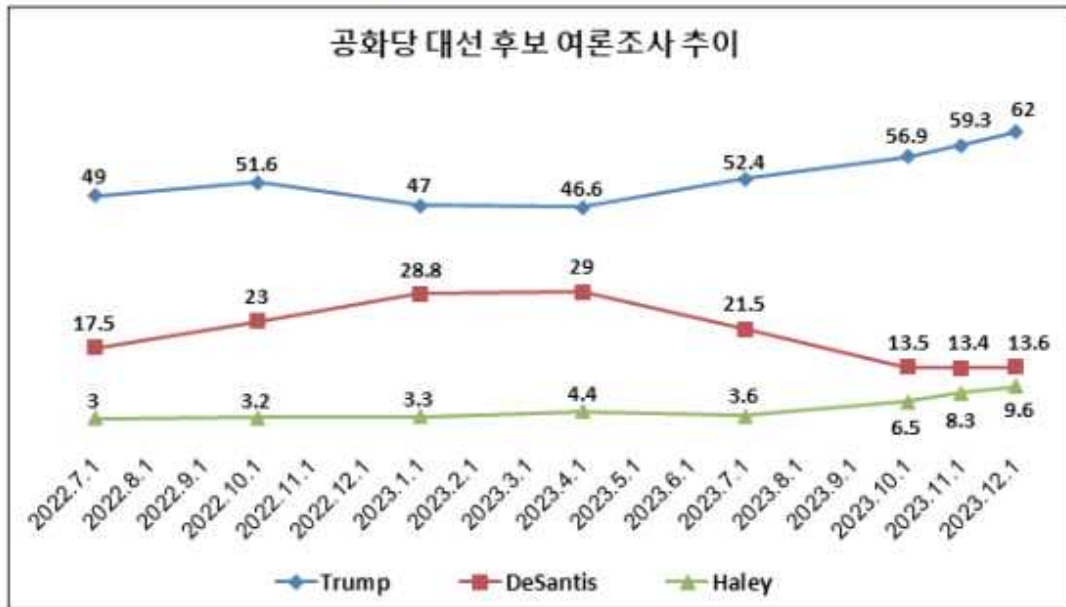
1. 2024 미국 대선 의 향방

가. 개요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향후 미중관계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예상.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presidential primaries) 2024년 1월에 시작.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2023년 6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선거 캠페인에 돌입.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가운데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돌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토대로 당내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 경합주 (battleground states) 유세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트럼프 vs. 바이든' 의 재대결을 기정사실화.

〈그림 1〉 2024 공화당 대선 주요 후보 여론조사 추이



*출처: RealClearPolitics.com. (www.realclearpolitics.com)

나. 대통령 후보 선출 제도와 현재 판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us). 대선 후보 확정 은 전당대회(national party convention)에서 대의원들(delegates).

대개 남부 표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와 슈퍼 화요일 (Super Tuesday)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
경선 초기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대세에 영향.

〈표 1〉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 일정 (50개 주 & 워싱턴 D.C.)

날짜	주(state)
1월 15일	아이오와
1월 23일	뉴햄프셔
2월 6일	네바다
2월 2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2월 27일	미시간
3월 2일	아이다호, 미주리
3월 3일	워싱턴 D.C.
3월 4일	노스 다코타
3월 5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유타, 버지니아
3월 12일	조지아, 하와이, 미시시피, 워싱턴
3월 19일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자스, 오하이오
3월 23일	루이지애나
4월 2일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욕,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4월 18-20일	와यो밍
4월 23일	펜실베이니아
5월 7일	인디애나
5월 14일	메릴랜드,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5월 21일	캔터키, 오리건
6월 4일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 다코타

공화당은 트럼프의 독주 예상 속,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돌풍이 변수로 등장.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시.
선거 결과가 레이스 초반에 사실상 확정되며 본선 레이스 국면으로 전환 예상.

다. 대통령 선거 본선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를 통한 간접선거.

2024년 11월 5일 유권자 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17일에 선거인단 투표를 각 주에서 실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득표 당선.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U.S. Census) 결과를 바탕으로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워싱턴 D.C.에 할당된 선거인단(3명)을 합친 것.

텍사스(Texas)주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 선거인단 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증가.

48개 주와 워싱턴 D.C.가 승자독식제 (winner-take-all system).

네브래스카주(5)와 메인주(4)는 주 권역&하원 의원 선거구 승자독식제 (statewide & congressional district winner-take-all system), 2명의 선거인단은 주 권역 승자에 게, 각 하원 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 1명의 선거인단을 할당.

라. 2024년 미국 대선 변수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이 바로미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

취임 직후 56%에서 점점 감소하여 2023년 12월 현재 40% 내외.

11월 26일 발표된 갤럽 조사 지지율이 37%로 역대 최저치.

취임 후 1,000일째 기준 지미 카터(33.0%) 전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수치.

경제 지표 개선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성과에 대한 인정은 부진.

2023년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

미국 경제는 2023년 1분기 2.0%, 2분기 2.1%, 3분기 4.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실업률은 2월 3.4%, 4월 3.5%, 7월 3.6%, 9월 3.8%, 11월 3.9%를 기록.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1월 6.4%에서 6월 3.0%, 7월 3.2%, 9월 3.7%로 인플레이션 개선.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간 1,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 성과.

미국 유권자들의 체감 경기는 다른 양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여파 지속.

2024년 대선 판세는 내년 상반기 미국 내 경제 상황의 온기 확산이 좌우.
올해 상반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개선
될 수 있느냐가 관건.

인플레이션 상황변화를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

하반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 예상.

마.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통상 현직 대통령이 선거 자원 활용, 대선 자금 모금 능력 등에 있어 우위, 유리한 선거 환경.
이번 대선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로 현직 이점은 반감.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주(state) 별 예측은 민주당이 다소 우세.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연구소(University of Virginia Center for Politics)
2023년 6월 29일 현재 공화당은 26개 주에서 235표의 선거인단을 획득, 민주당은 21개 주
와 워싱턴 D.C.에서 260표의 선거인단을 확보.

주요 경합 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4개 경합 주(toss-up states)에는 46표의 선거인단.
주요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지지층의 결집 및 동원과 무당파의 표심 향방이 결정.

2. 양 당 주요 후보 대외정책 전망

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

“Let’s Finish the Job!”

2기 새로운 정책보다는 1기 정책 성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 완료에 역점.

‘미국 리더십의 복원’ 목표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속 민주적 가치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고

외교를 재활성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하여 자유, 인권, 법에 의한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및 민주주의를 수호.

신기술, 보건, 사이버 공간, 우주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민주 진영의 국제 규범, 표준 및 제도 구축.

태평양 국가로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번영, 안보, 가치를 위해 협력.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인도네시아 등 파트너 국가들.

아세안과 같은 지역 다자 기구에 대한 강력한 개입 정책을 소생.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지속적 노력.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

(소)다자 협력 증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포괄적 협의체 대신 무역, 기술, 공급망, 국제 표준 등 사안별로 유연하고 임의적 대응. 다양한 양자(bilateral) 및 소다자(minilateral)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기본 틀/framework).

한·미·일 3자 협력, 오커스(AUKUS), 칩4(CHIP4) 등을 통해 사안별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F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제도화.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국제표준 관련 협력.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중국의 부상을 견제.

경제 안보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 2021년 3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명시.

미국의 통상정책 및 국제 경제 정책은 미국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새롭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인상시키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천명.

다른 나라들과 협상 시 미국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 노동·환경단체를 협상에 참여, 모든 경제 협정이 노동 및 환경 보호에 기여.

중산층이 국가적 성공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국제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언급.

첨단 제조업 생산 시설의 미국 내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체화.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의 제정.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과 첨단 제조업 생산 시설의 미국 내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1천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1천만 건 이상의 신규 소기업 창업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n America)’,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재선 캠페인

상향식(bottom-up) 경제를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경제비전.

‘투자, 교육, 경쟁’의 세 가지 주요 기둥(three key pillars).

미국에 대한 현명한 공공 투자로 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

공공 투자는 인프라 개선, 반도체, 청정에너지, 기후 안보 등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 집중.

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2기 행정부’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1기의 경험을 토대로 주요 정책 성과를 달성.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의 재활성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

국제무대에서 축소(retrenchment)와 자제(restraint)로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미국을 재건.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

미국우선주의 외교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유지·강화.

미국의 전략적 목표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미국 본토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시.

불필요한 국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증대.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견제. 국방예산 자동 삭감조치 폐지, 군대의 재건, 힘을 통한 평화 등을 강조.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하여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 기존의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우선주의

군사안보분야 '안보무임승차론'

가난한 미국이 부유한 서방,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과도한 지출. 기존 동맹관계의 틀을 재조정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대. 거래 중심적 동맹관은 미국의 동맹 수호 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증폭. 미국과 동맹국들 간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 분쟁 등 일련의 일방주의적인 행보. 다자주의적 협의체 구성 등 미국의 역내 동맹 규합 노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이 증폭.

경제통상 분야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 관세, 규제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들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여 국내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하여 '인도-태평양'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하고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네 가지 원칙

-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존중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공개적인 투자, 투명한 합의, 연계성(connectivity)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 준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안보보다는 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우선대외정책’을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외교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공세적 외교. 통상 분야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핵심.

안보·군사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미국의 힘과 리더십의 갱신 (Renew American Strength and Leadership)’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의 불개입.

외교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 (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복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협상 전망.

우크라이나로 보낸 비축 물품 복구비용을 유럽에게 보상 요청 가능성.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거의 2천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유럽은 그 금액의 극히 일부를 지출.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한 NATO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 지속.

통상정책 관련 캠페인 슬로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 (Fair Trade for the American Worker)’

필수 의료 및 국가 안보 물품을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 (4-year national reshoring plan)을 시행하고 미국의 모든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 소유를 금지.

관세 계획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을 강하게 만들 새로운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Strategic National Manufacturing Initiative)의 핵심 (linchpin).

국내 생산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 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s)’ 시스템.

외국 생산자들에게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 가계 소득, GDP 및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을 늘리며,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정부 수입을 창출.

미국 산업보호 위해 ‘트럼프호혜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추진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높은 경우 해당 국가의 물품에 동일한 호혜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폐기

‘TPP 2’라고 지칭하며 IPEF를 폐기할 것이며, 세금 감면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근간으로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근본적으로 개편.

미국우선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공급망을 복원하고, 미국 산업을 강하게 만들며, 미국 경제를 재활성화.

에너지 안보 관련 캠페인 슬로건 ‘에너지 지배력의 발휘 (Unleash Energy Dominance)’

미국 내 에너지 자원 생산의 족쇄를 풀고,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고 전 세계에 걸쳐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며 외국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에서 탈피 추진.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제거하고, 전기차 전환 정책을 종식, 파리 협약에서 재탈퇴.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모두에 대한 미국 내 투자생산을 확충하여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

재생 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에너지의 혁신을 가속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미국 내 시추를 허용.

3. 양 당 주요 후보의 중국 정책 전망

가. 바이든의 중국 정책

중국을 미국 안보에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 전략적 경쟁의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지연 혹은 억제시켜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를 유지. 방법적인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 추구.

역내 안보협력 강화, 군사 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 부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역외 국가들의 역내 진입.

군사·안보 분야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둘러싼 ‘경쟁’ (“small yard, high fence”).

민주적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대립’ 지속.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 안보 등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공간은 협소하게 유지.
‘경쟁, 대립, 협력’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 실용적(result-oriented) 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 지능, 핵심 광물, 의약품 등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중국의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를 차단 혹은 지연.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

중·장기적인 경쟁에 대비.

디리스킹 (derisking).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지속하되,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이중용도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 품목 및 분야에서 탄력적인 공급.을 확보.

▲국내 핵심 분야 원천산업에 투자하여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을 확충.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달지 않도록 관리.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핵심 분야 보호 및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경제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투자 심사 강화 등이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나. 트럼프의 중국 정책

대중국 견제 정책

중국 견제 정책이 임기 동안 경제·통상, 군사·안보, 인권, 정치 등 제반 분야로 확산.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협상을 진행.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소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중국에 대한 입장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현상변경 국가’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는 현상 타파국이며 역내 최대의 안보 위협국’으로 규정.

역내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압박.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모호한 입장 표명 및 대만 무기 판매 승인 등을 통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

미국 연방 의회도 ‘대만 여행법 (Taiwan Travel Act)’,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2019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 등을 통과시키며 중국 압박에 동참.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공산당 정부를 비판.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

보다 강력해진 ‘미국우선 통상 정책 2.0’.

비즈니스, 금융, 학계, 기술, 미디어 분야 및 심지어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중국 스파이 주장.

중국의 정보작전을 미국 밖으로 몰아내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미국 내 중국 자산을 포기하도록 강제.

중국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ade status)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4-year national reshoring plan)을 채택.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 제한 조치를 우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 포함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국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

중국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기업에 대한 연방계약을 금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고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금 부상.